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찬바람하호텔 PSD, 나무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참여사회연구소 최영주 723-9581)
제 목 개혁중간평가 토론회
날 짜 1998. 11. 19. (총 9 쪽)

보 도 자 료

「IMF 1년,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IMF 1년, 개혁중간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998. 11. 19(목). 10:00 - 1:00. 한글회관 1층 강당

1. IMF 1년을 맞이하여 새정부의 개혁과정에 대한 평가작업이 절실한 때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경실련, 녹색연합, 도시연대, 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연대회의, 천주교인권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재벌개혁, 정치개혁, 반부패행정개혁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1월 19일(목) 오전 10시 한글회관 1층강당에서 ‘IMF 1년, 개혁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부설) 소장 김대환(인하대 경제학과)교수가 진행하고, 참여연대 조희연 정책위원장,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태인 연구위원, 상지대 정치학과 정대화교수, 참여연대 차병직 협동사무처장, 한신대 사회학과 노중기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교수, 21세기한국연구소 김광식소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광현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사무처장이 발제자로, 여성단체연합 지은희 공동대표, 경실련 이성섭 정책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최영기 수석전문위원,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3.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벌개혁, 정치개혁, 사법개혁, 여성, 노동, 복지, 시민사회, 문화 등 총체적인 국가개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면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조희연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개혁을 위한 8가지 테제’라는 발표문을

통해 현실의 개혁과정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정권의 담당자들이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별첨자료▣ 1. 토론회 발제문 요약

■ 별첨 : 토론회 발제문 요약

1. 총론 : 개혁성공을 위한 8가지 테제 / 조희연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IMF 1년을 돌이켜 볼 때, 국민정부는 '위기관리정권'으로서는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개혁정권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정부가 문민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개혁심화'를 통한 위기극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혁성공을 위한 7가지 테제 형식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핵심적인 개혁의 과제를 중심으로 전격적이고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우리는 필요하면 '대통령 긴급명령' 같은 조치를 취해서라도 재벌체제의 과감한 혁신, 부실기업의 엄정한 퇴출, 대기업들의 중복과잉투자구조의 전면적인 재조정 등 핵심적인 과제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친개혁적인 사회기풍을 회복하여야 한다.

셋째, 개혁담론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포커스를 이동할 필요가 있다. 네째, 개혁의 사회적 기반(social base)의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혁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영역에서 과감한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가지라도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주라.

여섯째, 정부는 사회적 협약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개별사업장 수준에서건 노사정위원회 수준에서건 일단 성립한 협약은 재벌의 반발이나 기업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단호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정의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방법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특별검사, 내부비리 고발자지원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부패방지법이 필요하다.

여덟째, 개혁의 '다(多)중심화'를 위해 즉 개혁의 중심이 다양하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요소요소에 개혁적인 세력을 전진배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혁적 재편도 심도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재벌체제의 개혁 / 정태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재벌개혁의 방향

1) 은행에 의한 재벌 통제

한국 재벌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금융연관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으로 해서 무한정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며 동시에 망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금융연관을 끊어서 금융기관이 재벌로부터 독립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재벌체제 해체의 최우선의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적 정책이 올바르다고 해도 그 효과를 무력화할만한 정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바로 은행의 재벌 소유를 허용하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재벌 내 부실기업의 소유지배권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거대부실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것(debt-equity swap)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은행이 지는 부담의 일부는 국가가 떠맡아야 한다. 일반적인 부실채권의 처리에서의 국가 개입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2) 내부로부터의 재벌 통제

기업의 경영자를 통제하는 방법은 첫째로 주식시장에 의한 통제, 둘째로 은행 등 채권자에 의한 통제, 그리고 노동조합등 내부로부터의 통제가 있다. 정부는 세 번째의 통제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내부의 통제는 정보비용과 감시비용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유력하다. 사외이사제도라든가, 외부 감사제와 같은 기업 내의 통제와 더불어 노동조합에 의한 통제는 대단히 유력한 수단이다.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정부 처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근본적으로 부인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참여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고른 분배는 형평성 뿐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3) 경쟁정책

한국의 상황에서 경쟁정책은 흔히 오해하듯이 진입장벽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 산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가전, 철강산업등은 이미 과점상태이며 포화상태이다. 막대한 자본동원이 진입장벽인 한 재벌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경쟁정책은 재벌과 여타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재벌의 내부 거래, 재벌간의 담합 행위에 관해서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산업정책

국가가 과거와 같이 모든 것을 지시하는 행정 규제로 재벌들을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이제 재벌의 과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또 산업기술의 성격상 과점화하지 않을 곳으로 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국내 기업에만 유리한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없다. 특정 산업이나 지역의 하부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이를 통해 재벌의 비중을 점점 더 낮춰서 거시 정책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사람을 바꿔야 한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할 수는 없다. 현재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집단의 장을 모두 바꿀 필요가 있다. 무슨일이 있어도 재벌체제의 수호세력이 경제개혁의 주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재벌해체론자를 중심으로 신고전파 개혁론과 순수좌파가 개혁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재벌총수의 문제

현재의 재벌체제가 지속된다고 하면 총수의 역할은 분명 있다.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로 볼 때 재벌 내의 조정은 오로지 독재적인 총수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부의 반란은 30년 이상 쌓여온 인맥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바로 박정희 일인 독재체제가 허무하게 무너졌듯이 총수에 대한 공격은 이 체제를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다. 구조개혁과 함께 인적청산의 법률적 과제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개혁의 평가와 과제 / 정치화 (상지대학교 · 정치학)

○ 정치가 바뀌지 않고서는 개혁의 시작은 불가능하다. 정치가 개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한 개혁의 효과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모든 개혁에 앞서는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 또한 정치개혁은 개혁 그 자체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력기반의 강화를 통해 집권세력의 초기 역량을 극대화하고 반대세력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자, 개혁과정에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개혁의 성격과 방향은 정치개혁에 종속되며, 개혁의 성공 여부는 정치개혁의 성공에 종속되는 것이다.

○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망국적 지역주의, 극단적 보수주의, 파벌주의, 각종 연고주의, 정경유착과 부패라는 개념 등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우리의 정당, 선거, 국회 어디서도 건강성을 발견할

수 없다.

○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정부'로 출발한 김대중정부 하에서 정치개혁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의 개혁은 방향을 상실하고 있다. 정치영역에서 인적청산과 관료개혁이 지연된 반면 '여소야대'에 연연하여 개별적인 의원영입 등 정계개편에 몰두하는 한편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 담론에 집착하여 '정치축소'에 급급한 것은 등이 그것이다. 이 배경에는 정치개혁 프로그램의 부재와 개혁구심의 미형성 등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치개혁의 핵심인 '반민주성'의 극복 대신 '비용'의 축소가 강조된 것이다.

○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한 정치발전으로서 제도개혁 차원에서 정당발전, 의회발전, 공명선거를 포함한다. 그러나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제도개혁은 불가능한 것이다.

○ 여기서 구조개혁이란 일차적으로 인적청산과 관료개혁을 통한 국가기구의 개혁적 재정비를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이고 제도적인 리더쉽을 형성하여야 개혁의 추진이 가능하다. 바로 이 점에서 제도적·집단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구심의 형성이라는 개념이 도출된다. 정치관행과 정치문화의 개혁 역시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여러 가지 정치개혁의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적청산과 인사쇄신을 출발점으로 해서 청와대, 행정부, 집권여당 사이에서 개혁을 적극 추진할 개혁구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올바른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 / 차병직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는 일시적 개혁의 수단이 아닌 사회의 가치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법률체계는 부패를 해소하고 방지하는 기능을 통하여 맑은 사회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 체제가 들어선 지 1년이 경과하고 신정부가 집권하고 첫 해를 넘기면서, 위기로부터의 근본적 탈출을 위한 법치주의적 개혁의 과제로 다섯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책은 부패방지법의 제정밖에 없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돈세탁 행위를 규제하며, 구체적으로는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패방지법의 기준에 맞추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다듬고, 방만한 기업 경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비리경영인의 재임을 제한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더 낮추어 기업감시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셋째, 어떤 형태로든 특별검사제를 수용해야 한다. 특별검사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너무 확대하려 해서도 곤란하다.

넷째, 사법관련기관의 내부민주화를 강화해야 한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반민주적 법률에 대한 개폐 작업을 더 미룰 수 없다. 사회에 깊게 스며 있는 고질적 보수의식과 과민한 반공이데올로기는 개혁의 대표적 장애요소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초작업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의 개폐다.

IMF시기 '국민정부'의 노동정책 : 한계와 대안 모색 / 노중기(한신대)·김동춘(성공회대)

○ 현재 김대중정부의 노사정위원회 등의 노사관계정책과 실업정책에서 개혁적 요소를 찾아보는 힘들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배제적인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정책기조가 세부정책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상적으로는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대중의 신뢰가 점차 축소되고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로 나타난다. 노동대중의 불신은 김대중정부 중·후반기의 정치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 김대중정부가 ‘국민의 정부’, ‘개혁정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첫째 적어도 노동정책 영역에서는 유연화, 생산성, 경쟁력담론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

둘째, 수백 명에 이르는 구속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있는 실업억제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리해고, 파견노동자제도 재논의를 수용해야 한다.

넷째, ‘고통분담’, ‘경쟁력’, ‘산업평화’ 그리고 ‘신노사문화’ 등 이데올로기공세를 중지해야 한다.

다섯째, 재벌과 수구 정치세력, 보수언론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조치’가 나와야 한다.

○ 이런 선행조치 이후에 ‘개혁’이 가능함. 그 방향은 21세기 노동복지사회를 도출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 실시 일정을 명확히 공표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사회보장제도의 전면 실시, 교섭구조의 전환, 정치개혁과 개방, 노동행정의 전반적 재조정과 내실화---노동행정의 자율성 확보 등이어야 한다.

사회복지 평가와 개혁과제 / 조홍식 (서울대 교수, 사회복지)

○ ‘국민의 정부’ 출범은 다른 어떤 정당 보다 포괄적인 사회복지 공약을 내어놓았고, 아울러 대통령 개인의 개혁적 성향과 소의 계층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은 비록 상대적이지만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후 경제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노동자 정리해고의 불가피성과 함께 자본의 구조조정을 통한 개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응하여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정부는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지속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여 응급조치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점들은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 임금삭감, 기업복지 축소 등에 의한 경제, 사회적 위기와 그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 대책 및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적 확충 등 복지욕구의 폭발적 증가에 대하여 국민정부는 아직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현재 IMF 체제하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기구로부터의 탈락자, 즉 실업자들에 대한 기본 생계보장대책을 국가가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 구조조정도 불가능해 짐으로써 사회통합을 기약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저성장·고실업 사회에서 점차 자유시장과 가족을 통한 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체계가 약화되고 붕괴되는 충격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기약하는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의 국민복지 기본선을 국가가 주된 책임을 지고, 보장하는 국가 사회복지제도의 일대 개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이와 관련된 개혁 과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전국적 소득조사의 실시를 토대로 조세 형평을 강화하여 정부지출 복지예산의 확대
- 2) ‘빈곤선’ 설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3) 4대 사회보험의 통합
- 4)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시설 문제 개선
- 5)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을 위한 행정체계의 확립
- 6) ILO 사회보장 관련 조약 비준 및 시행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 김대중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차별화되면서 의미있는 민주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는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물론 정부와 경제계와의 관계정립도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정립의 기준은 정부-시민사회-경제계의 '3자균형론'이다.

○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과대성장된 정부영역을 효율화시키는 규모의 개혁과 함께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과 '선별적 지원'을 철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자발적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화 조치를 즉각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정부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규제 역할을 서비스의 주체로 바꾸는 것이다. 앨 고어 부통령이 주도했던 미국 행정개혁위원회의 경우 정부기구의 존폐 여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부개혁의 경우 규모만이 아니라 기능개혁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역시 정부의 존재이유와 평가기준인 정부 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선언해야 한다.

○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NGO)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청결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모금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것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민간운동과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운동지원법]이 마련된다면 이 법은 특정한 단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시민운동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될 수 있는한 공익활동 일반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간접지원 위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관변단체론'이 제기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 이제 우리에게 권력의 관점, 또는 돈의 관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시각이라는 '제3의 관점'이 필요하다. 관점만이 아니다. 시민들 스스로 시민사회의 장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주체적이고 참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자율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운영에 더욱 노력해야 하고, 시민들은 무임승차 의식을 벗어나 참여의식을 계발해야 한다.

○ 시민사회에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사회가 계선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발전원리는 권력의 논리나 시장의 영역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즉 시민사회의 발전방향은 시민들의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쪽이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내부적 발전방향은 철저히 다원적이라야 한다.

○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영역이나 시장영역과 함께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논의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원용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통일특별위원회' '진실과 화해 위원회' '민족주의와 세계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같은 것들이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합의된 것을 각 영역의 원리에 맡도록 행동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각 영역의 독자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 위기의 문화적 뿌리, 위기 극복의 문화적 전망과 정책과제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미학/문화이론)

○ 경제생산이 제일이지 아니라 자율적이고 자아실현적인 삶을 조직화하고 집단적인 가치의 능동적인 창조과정을 삶의 제일의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된 문화 패러다임과, 반복적인 비판을 넘어서 일상적 삶의 배치를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는 지속적인 문화적 노력만이 '비사회적'인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서 시장경제를 문화적 삶에 봉사하게 하고,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 문화정책 분야 :

(1) 중앙집중적이고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해온 일반행정공무원 주도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행정체제와 제도운영을 분권적이고 전문가와 민간 참여에 입각한 개방적인 문화행정체제와 운영으로 하루 속히 혁신해야 한다.

(2) 문화예산 운영관행의 혁신이 시급하다. 그간 상당수의 문화예산은 H/W 부분에 투입되어 왔을 뿐, 정작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전문인력 육성에 관련된 S/W, C/W 부분은 방치되어 왔다. 앞으로는 예산계획의 방점이 S/W, C/W의 육성으로 시급히 이동해야 하며, 관련 회계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3)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해온 정부의 직접 사업수행방식을 지양하고 아웃소싱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도모하고 문화적 창의력과 전문기획력의 민간차원에서 지속적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이와 같은 조직인력, 예산집행방식의 획기적인 혁신을 전제로 중앙에 집중된 문화산업과 예술창작/향수의 인프라 구조를 분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동시에 엘리트주의적인 고급문화 개념을 지양하고 각지역과 각계각층, 각세대와 남녀들 각자가 개성적이고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역량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참여민주주의적인 성격의 새로운 지역문화, 대중문화, 문화교육, 문화복지의 개념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는 문화기반시설의 운영과 신설, 새로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문화관광부는 현재 정부부처 사이에서 중간 정도의 서열에 머물고 있고, 경제위기로 인한 예산 삭감에서도 그 순위가 크게 뒤로 밀리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창조적 문화국가 건설'은 한낱 구호로 머물기 쉽다. 프랑스처럼 문화부장관이 각료서열 1위가 되지는 못한다 해도 상위권으로 그 서열이 조정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부가 21세기 3대 산업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의 S/W, C/W적인 측면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실제로 맡을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정부 내부에서 문화정책 분야의 위상의 상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경제위기가 심해지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왕에 있던 문화국마저 폐쇄하고 경제부처로 흡수해버리는 사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태는 지역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현실화시키는 데 가장 적극적인 계기가 될 다양한 주민문화활동의 뿌리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속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심화되는 남녀차별·여성빈곤의 현황과 과제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IMF이후 여성의 삶

- IMF 이후 실업대란이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여성의 입장은 남편 기살리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는 실업이 남성의 문제이고 여성은 실직남편을 감싸주고 기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은연 중에 강조하는 것이다. 실직 가정의 주부는 살궁리를 하면서 실제 가정의 역할도 해야 하고, 실직한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남편을 위로하는 아내의 역할도 해야 한다.

- 그러나 사회에서는 여성을 생계부양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재취업 훈련이나 창업 지원이 미미한 상태이고 가족을 보살피기 위한 감정노동이 증대되어도 이를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직자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아내나 어린 자녀들에게 옮겨져 분풀이성 폭언, 폭력행위, 가정경제 파산에 따른 책임추궁 등이 많다고 한다. IMF 경제위기의 시대에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서 빈곤상태에 떨어지게 되고 가정에서도 사면초가의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세계 시장에서 벌어지는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동자는 높은 생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성노동력은 모성보호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직장과 가사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조치가 필요하므로 생산성이 낮다고 취급되어 범지구적 무한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유교적 전통에 의하여 성역할분업이 강하게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은 생계책임이 없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고의 우선대상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 지난 8월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국민회의, 그리고 정부의 합의하에

성차별적인 부당 노동행위를 통해 복지후생팀의 여성노동자들을 구조조정의 완전한 희생양으로 삼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가 98년 8월 31일 ~10월 2일에 걸쳐 서울·경기지역 재직 노동자 8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승진곤란(58.2%), 출산휴가사용곤란(52.5%), 육아휴직사용곤란(51.2%), 생리휴가사용곤란(48.7%), 여성비정규직증가(44.1%) 등 여성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노동환경도 더불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심각해지는 여성문제로는 결혼임신퇴직 19.6%, 승진·승급차별 28%, 부당한 잡무 19.8%, 업무나부서배치상의 차별 17.6%, 성차별적인 해고 15%, 임금차별 12.7%, 육아휴직, 보육시설 등 육아지원조치 9.3%, 교육 연수상의 차별 7.9%, 비인격적인 대우 5.9%, 1.6%가 성희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 여성실업의 특징은 비경활인구로 퇴출되어 직접적 실업통계로 들어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고정관념에 의해 실업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으며 특히 일용직, 임시직,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폐업되거나 해고되어 실직한 여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조차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98년 3월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 중 여성은 31.4% 차지) - 전직 여성실업자 중에는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 여성실업자가 85천명에 이르고 이들은 남성에 비해 재취업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업기간이 길어지고 이들 가구는 장기간 빈곤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 여성가구주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장기적인 실직으로 인한 빈곤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대안찾기

(1)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성차별적인 해고 및 구조조정 방지, 간접차별 규제, 보육시설 확대와 육아지원, 직업훈련 실효성 제고 등

(2) 여성인권 강화 :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여아 매매춘 방지

(3) 여성의 빈곤화 예방 :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확충, 여성연금권 확보

(4) 여성복지 및 가족복지 확충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아동수당, 노인복지 확충

(5) 여성의 정치·경제적 주류화 및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